

# 북·중 경제협력 강화의 파급 영향

정형근 |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 | hgjeong@kiep.go.kr

최근 북한의 對中 무역의존도가 50%를 상회하고 북·중간 투자 및 협력 관계가 제도화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는 1990년대 이전 구소련과의 관계에서도 있었고 향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구조이다.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측의 협력과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더욱 적극적 대북 진출에 대비해 향후 정부차원의 남북경협에서는 남북한의 산업표준화에 주력해야만 한다.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차기 6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북·중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간의 본질적인 입장차이가 좁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 1. 문제제기

2006년 새해 벽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4월 방중(北京, 天津) 이래 1년 9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고,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후 불과 70여일 만에 북·중간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었다. 중국은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특별히 환대함으로써 양측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과시하였고, 특히 북핵문제와 위조지폐 등으로 곤경에 처한 김정일 위원장을 각별히 배려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후견자임을 부각

시켰다.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 오주석의 상호 방문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상호 방문은 북·중 관계를 보다 '특별한 관계'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2004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북·중간 경제협력관계가 제도화되면서 양국관계가 경제관계를 축으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정치경제적 밀착화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속국화 된다는, 즉 동북4성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중 관계가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지원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간의 논쟁 중에서 후자의 입

장에서 북·중간 경제협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양국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원인 및 파급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북·중 경제관계의 강화가 남북경협 및 6자회담 등 기타 한반도 안보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북·중 경제협력 강화 동향과 원인

### 가. 북·중 경제협력 동향

#### 1) 경제협력 현황

1990년만 하더라도 북·중 교역규모는 4.83억 달러(북한의 대외 교역액의 11.6%)밖에 되지 않았다. 북·중간의 교역량은 1993년에 9억 달러(북한 교역액의 34%)까지 상승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에서 구상무역을 경화

표 1. 북·중 교역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교역액	6.9	9.0	6.2	5.4	5.6	6.5	4.1	3.7	4.88	7.37	7.38	10.2	13.85	15.80
비중	27	33	29	26	29	30	29	25	25	33	33	43	48	-

자료: Kotra,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표 2. 최근 북·중 경제협력협정 체결 현황

2002. 8	상품규격화 및 품질분야협력협정
2005. 3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2005. 7	세관협력협정 체결 추진
2005. 10	경협의 새로운 진전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4개 항 합의
2005. 10	11차5개년 계획기간(2006~10) 중 경제협력협정 서명

결제로 바꾸면서 1999년에는 3.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전환점으로 양국간 고위급 상호 방문이 정례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2004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3.85억 달러로 북한 총 교역 (32.95억 달러; 남북 상업성 교역 포함)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은 15.80억 달러를 기록해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교역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화에서도 나타난다. 2002년에는 「상품규격화 및 품질분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서 산업기반에서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05년에 양국간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 체결과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 2)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2003년 이전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는 1~2건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투자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시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대폭 증가(2003년 100만 달러 → 2004년 5천만 달러)하였

다. 더욱이 2005년 3월에는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이 맺어져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주로 광업과 수산업 등 투자이익의 회수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투자방식은 중국이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광석이나 석탄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간산업이나 제조업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sup>1)</sup> 그러나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시 대북 투자확대방안을 밝힌 바 있고 2006년부터 중국이 동북3성 개발에 역점을 두는 「11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북한내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국의 대북 지원

중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2000년 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상지원은 대부분 원유 50만 톤과 식량, 산업설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식량의 경우는 중국이 북한의 필요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략물자의 경우 북한은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지원은 양국 고위급인사의 상호 방문시 약 5천만 달러 ~ 1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현재 북·중간 SOC 사업으로는 중국이 나진항 부두를 5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나진~원정간 도로 67km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나. 북·중 경제협력 강화 원인

앞에서 보았듯이 2000년을 기점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이 규모 면에서나 제도적 측면에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최근 들어 긴밀해지고 있는가? 이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양국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 1) 북한의 입장

첫째, 북한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2년 7.1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가격현실화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생필품과 원자재 공급 등 중국측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7.1조치 이후의 북한경제는 아마도 아사 직전의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을지 모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이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경제적 현실이 중국을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북한당국도 북·중간 우호 증진 및 당정사업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관계 증진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얻고

이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중국과의 정치·경제 강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보호받으며 핵문제를 활용하여 미국과 수교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데 목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에 대응하는 과거 냉전시대의 대립구도에 대응할 수 있는 축으로서 중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 2) 중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 배치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중국은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국경지대의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확보하며 북한경제를 중국의 영향권에 내놓는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북한 라진항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동북3성 등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라진항을 선점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셋째,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를 더 복잡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 등 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도록 보호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중간의 외교관계를 다루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선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북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 3. 북·중 경제협력의 파급영향

#### 가.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

일각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대중 의존도로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화 또는 '속국화' 된다고 우려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중 관계는 '속국화'를 논할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단순히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속국화를 논한다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구소련에 '속국화'되었던 나라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약 50% 가량이다. 이는 1990년 북한의 대

소련 무역의존도인 53%보다 낮은 수준이다. 교역규모 면에서도 2005년 북·중간의 교역액 15.80억 달러는 1990년 북한과 구소련과의 교역량인 22.23억 달러에 못미치고 있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을 구소련의 속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당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북한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미, 북·일, 남북 관계의 발전 속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북·중간의 경제협력의 강화는 외형상으로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북한경제의 상황은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를 살펴보면 북·중관계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이한 점은 북한이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통미봉남의 입장에서부터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미국을 설득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북한은 남한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도 북·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로 인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과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학습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남북경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는 반드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북·중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향후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산업표준화와 산업재배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진출을 통해서 공장 과 기반설비 등을 중국의 표준으로 이전할 경우 통일한국의 산업구조 및 산업체계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광산, SOC 등 장기간에 걸친 북·중간 계약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나. 북핵협상에 미칠 영향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위조지폐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기 6자회담 개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북·중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본질적으로 북·미간의

불신에 의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고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외에도 인권, 미사일, 재래식 군비 등 모든 이슈에 관해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상 이러한 양측의 강경한 입장인 북·미 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앞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순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행순서에서 북한은 신뢰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국간의 입장차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중국이 더욱 강력해진 대북 영향력을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훼손을 우려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치 않는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북핵문제의 안보리 논의나 북한의 후견국 역할 중단, 국경 봉쇄,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 PSI의 목인 등 다양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러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본도 핵무장할 수 있다는 미국의 압력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미간 긴장을 초래하여 역내 안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결국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으로서도 현재 더 이상 개혁과 변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현재의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중용하고 북한이 북한식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 개방 모델을 찾는 데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등 안보문제를 제외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권유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학습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북·중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나오는 말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북중간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협력관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상 북·미, 북·일, 남북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바뀔 수도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북·중간의 경제적 협력 심화를 지나치게 우려하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경우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 개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경험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기회 확대와 위험부담 축소차원에서 한중 기업간 대북 합작진출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산업표준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경제**